

# **보도자료**

2025. 1. 13.



## **양형위원회**

문의

운영지원단장 문중흠  
 ☎ 02-3480-1924

### **양형위원회 1/13(월) 제136차 회의 결과**

- 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는 2025. 1. 13. 제136차 전체회의를 열어,
-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,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고,
  - 기존에 심의한 사기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,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초안과 함께 의결하여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작성·공개하고, 각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\*하기로 결정하였음
- [\*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, 관계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최종의결하게 됨(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, 양형위원회운영규정 제16, 17, 22조)]

- 향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을 토대로 아래 일정과 같이 공청회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. 3.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·확정할 예정임
- 향후 일정
    -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: 2025. 2. 17.(월), 대법원 대강당(사기범죄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, 동물보호법위반범죄, 성범죄 양형기준안)
    -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: 2025. 3. 24.(월), 대법원 회의실

-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각 양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2면 이하와 같음

## 1.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·의결

- ☞ 지난 제132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대상 범죄로 새롭게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,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, 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하여, 이번 회의에서 권고형량 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,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함
- ☞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안의 상세는 ‘[별첨] 성범죄 양형기준안’ 참조

### 가. 회의 진행 경과

- 지난 2024. 6. 17. 제132차 전체회의에서 ① 공중밀집장소 추행, ②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, ③ 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 범죄를 새로이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추가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바 있음

적용법조		구성요건	법정형
성폭력처벌법	§ 11	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	3년 ↓, 3,000만 ↓
	§ 10 ①	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	3년 ↓, 1,500만 ↓
형법	§ 303 ①	업무,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	7년 ↓, 3,000만 ↓

- 이번 제136차 전체회의에서는 위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인자,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여,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고, 양형인자 등을 마련함

### 나. 권고 형량범위

- 2018. 10. 16. 성폭력처벌법의 개정·시행으로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(제10조 제1항)의 법정형이 상향(2년 이하의 징역 → 3년 이하의 징역)되었고, 2020. 5. 19. 성폭력처벌법의 개정·시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(제11조)의 법정형도 상향(1년 이하의 징역 → 3년 이하의 징역)되었음
- 이와 같이 최근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참작하고,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

○ 형량범위 정리

※ 이하 삭제는 붉은 글씨, 수정은 파란 글씨로 표시함

〈공중밀집장소 추행〉

(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, 중유형 나.에 소유형 1로 추가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공중밀집장소 추행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
<del>12</del>	일반강제추행	- 1년	6월 - 2년	1년6월 - 3년
<del>23</del>	청소년 강제추행	1년 - 2년	1년8월 - 3년4월	2년8월 - 4년8월
<del>34</del>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<del>45</del>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	3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<del>56</del>	특수강도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9년 - 13년

〈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〉

(성범죄 양형기준 대유형 1, 중유형 다.에 소유형 1, 2로 추가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	- 8월	6월 - 1년	10월 - 2년
2	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	- 10월	8월 - 1년6월	1년 - 2년6월
<del>13</del>	의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<del>24</del>	의제간음/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<del>35</del>	유사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<del>46</del>	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
## 다. 양형인자

### ▣ 공중밀집장소 추행

-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죄(13세 이상 대상)(대유형 1, 중유형 나)의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로 함

### ▣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

-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, 구성요건 및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(13세 이상) 및 공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(대유형 1, 중유형 다)의 양형인자표를 공유하기로 함
-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, 피보호·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'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'를 특별감경인자로, 피보호·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'윤간', '임신'을 특별가중인자로, '동일 기회 수회 간음'을 일반가중인자로 각 설정함

## 라.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비

### ▣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'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 에서 '(공탁 포함)' 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

-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,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양형인자에서 위 문구 삭제

## 2. 사기 / 전자금융거래법위반 / 동물보호법위반범죄 각 양형기준안 의결

- ☞ 지난 제133~135차 회의에서 심의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양형기준안으로 의결,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함
- ☞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아래 각 양형기준안의 내용은 기존 초안과 대체로 동일함.
- 각 범죄의 전체 양형기준안의 상세는 ‘[별첨] 사기범죄 양형기준안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,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’ 참조

### 가.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#### ■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

-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의 변화, 전세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,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
- 일반사기 및 조직적 사기의 각 소유형 3(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)의 가중영역과 소유형 4(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),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의 기본 및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함
- 이에 따라 일반사기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 및 조직적 사기 소유형 4(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)의 가중영역 상한이 17년으로 상향되어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된 가중영역\*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\*\*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함. 또한 조직적 사기 중 소유형 5(이득액 300억 원 이상)의 가중영역 상한은 무기징역까지 권고함(종전에는 조직적 사기 소유형 5의 가중영역의 경우에만 무기징역의 선택이 가능하였음)

[\*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하는데, 이를 ‘특별조정된 가중영역’이라고 함.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]

[\*\* 권고적 효력을 가진 양형기준의 적용원칙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르게 됨]

○ 형량범위 정리

01 | 일반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- 1년	6월 - 1년6월	1년 - 2년6월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10월 - 2년6월	1년 - 4년	2년6월 - 6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1년6월 - 4년	3년 - 6년	4년 - <del>7년</del> 8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3년 - 6년	5년 - <del>8년</del> 9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
5	300억 원 이상	5년 - 9년	6년 - <del>10년</del> 11년	8년 - <del>13년</del> 17년

02 | 조직적 사기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1억 원 미만	1년 - 2년6월	1년6월 - 3년	2년6월 - 4년
2	1억 원 이상, 5억 원 미만	1년6월 - 3년	2년 - 5년	4년 - 7년
3	5억 원 이상, 50억 원 미만	2년 - 5년	4년 - 7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
4	50억 원 이상, 300억 원 미만	4년 - 7년	6년 - <del>9년</del> 11년	8년 - <del>11년</del> 17년
5	300억 원 이상	6년 - 10년	8년 - <del>13년</del> 15년	11년 이상, 무기

▣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

☞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‘[별첨] 사기범죄 양형기준안’ 중 해당 부분 참조

- 특별감경인자인 ‘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’의 정의규정 중 ‘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’를 제외함
- 특별감경인자인 ‘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’의 정의규정 중 ‘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’를 삭제하고,

특별가중인자인 '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'의 정의규정에 '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,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'를 추가함

- 특별가중인자인 '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'의 정의규정 중 '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'를 삭제함
-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함
  -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,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, 감경인자인 '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 및 '상당한 피해 회복(공탁 포함)'에서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
  -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사,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·판단하도록 함
- 조직적 사기의 일반감경인자로 '일반적 수사협조'를 추가함
-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함
  -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'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'를 새롭게 추가하고, 조직적 사기 유형에까지 적용되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'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'를 일반사기 유형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제한함

## 나.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

■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하는 등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

-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법정형의 상향(3년 이하의 징역 → 5년 이하의 징역),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실무,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범죄의 특수성,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함
- 이에 따라 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(유형 2)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(법정형 상한)까지 권고함

○ 형량범위 정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적 범행	<del>6월</del> - 8월	4월 - <del>10월</del> 1년	<del>6월</del> - <del>1년2월</del> 8월 - 2년
2	영업적·조직적·범죄이용목적 범행	<del>8월</del> - 10월	6월 - 1년6월	<del>10월</del> - <del>2년6월</del> 1년 - 4년

▣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정비

☞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‘[별첨]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’ 중 해당 부분 참조

- 특별감경인자인 ‘단순 가담’의 적용범위를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으로 제한함으로써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적용범위를 축소함
-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‘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’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추가함

## 다.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

▣ 설정대상 범죄

-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: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, 제2호[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]
-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: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(제10조 제2항), 제3호[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]
- 위 각 행위의 상습범: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[위 각 형의 1/2까지 가중]

▣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

-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의 법정형, 그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, 양형실무,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함
- 각 유형 모두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됨



○ 형량범위 정리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	- 8월, 100만 원 - 700만 원	4월 - 1년, 300만 원 - 1,200만 원	8월 - 2년, 500만 원 - 2,000만 원
2	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	- 6월, - 500만 원	2월 - 10월, 100만 원 - 1,000만 원	4월 - 1년6월, 300만 원 - 1,500만 원

▣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 설정 내용

☞ 전체 양형인자표 등은 ‘[별첨]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’ 중 해당 부분 참조

- ‘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’, ‘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’, ‘잔혹한 범행수법’ 등을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
- 범죄의 보호법익, 형사정책적 요청 등을 고려, ‘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’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, ‘상당한 피해회복’을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설정하고, 공탁 관련 양형인자를 정비
- ‘참작할 만한 범행동기’, ‘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’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
- ‘중한 상해(2유형)’를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, ‘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(2유형)’를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

※ [별첨] 의결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안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,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, 성범죄 양형기준안